

국 민 이 문 고 정 부 가 답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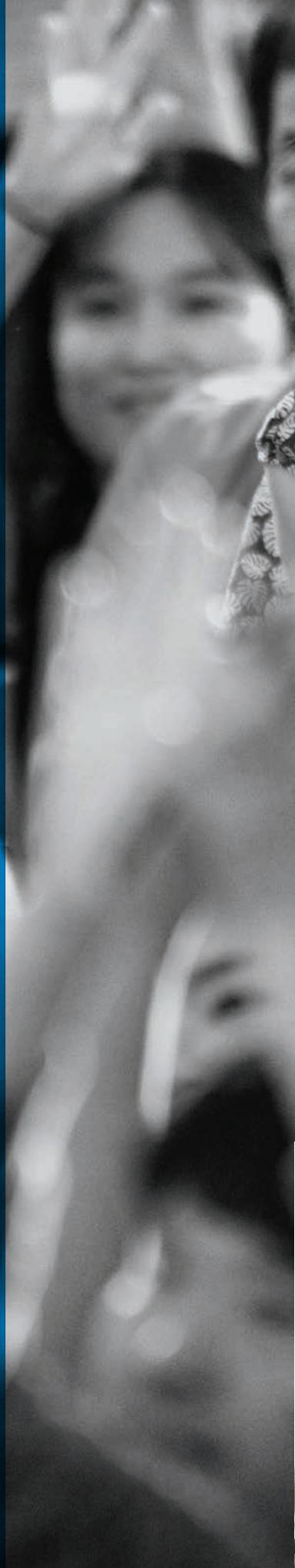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하는
국민과 정부의 직접소통 게시판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해인
2017년 8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 3년을 맞았습니다.
3년간 공감, 분노, 비판,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국민청원에 담겼습니다.

오롯이 국민들의 참여로 채워진
국민청원 3년의 시간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국민청원

2017.8.19.~2020.7.31. 기준

총 청원 수 **87만 8,690** 건

총 동의 수 **1억 5,088만 8,250** 건

총 방문자 수 **3억 3,836만 4,174** 명

월 평균 방문자 수 **943만 3,945**명

일 평균 방문자 수 **31만 4,464**명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189**건

178건 답변 완료

일평균 청원 수 **817**건

일 평균 동의 수 **14만 230**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최다 청원 분야	1위 정치개혁	2위 인권/성평등	3위 보건복지	4위 안전/환경	5위 외교/통일/국방
최다 동의 분야	1위 인권/성평등	2위 정치개혁	3위 안전/환경	4위 육아/교육	5위 보건복지

[분야]는 청원게시자가 글을 작성하면서 17개 항목 중 선택
경제민주화, 교통/건축/국토, 농산어촌, 문화/예술/체육/언론, 미래, 반려동물, 보건복지, 성장동력, 안전/환경, 외교/
통일/국방, 육아/교육, 인권/성평등, 일자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정치개혁, 행정,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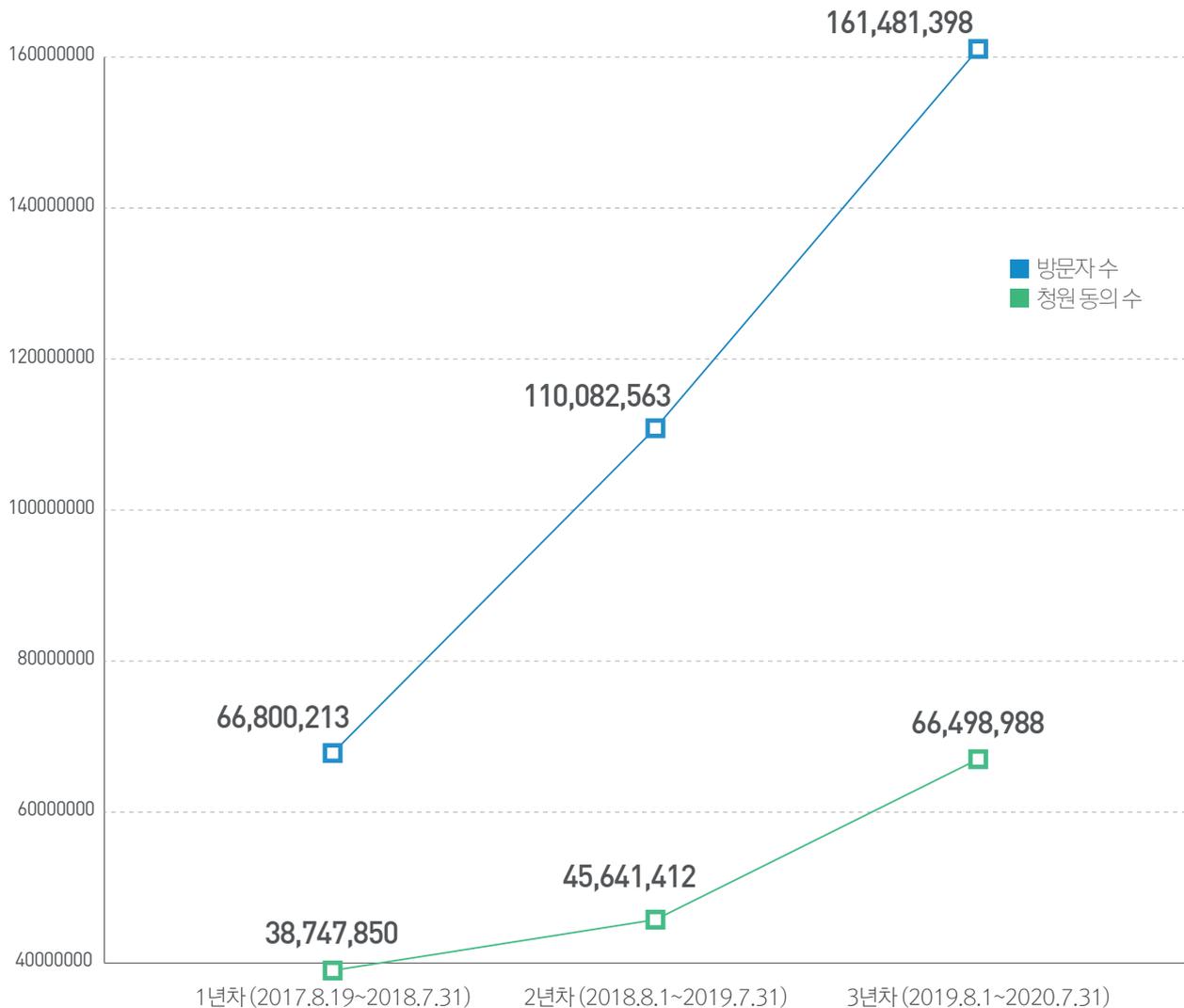
국민청원 참여, 얼마나 더 늘었나요?

2017.8.19.~2020.7.31. 기준

방문자/동의수

국민청원 동의 수와 게시판 방문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년차와 비교해 3년차 청원 동의수는 1.7배, 방문자 수는 2.4배 증가했습니다.

연차별 방문자 및 청원 동의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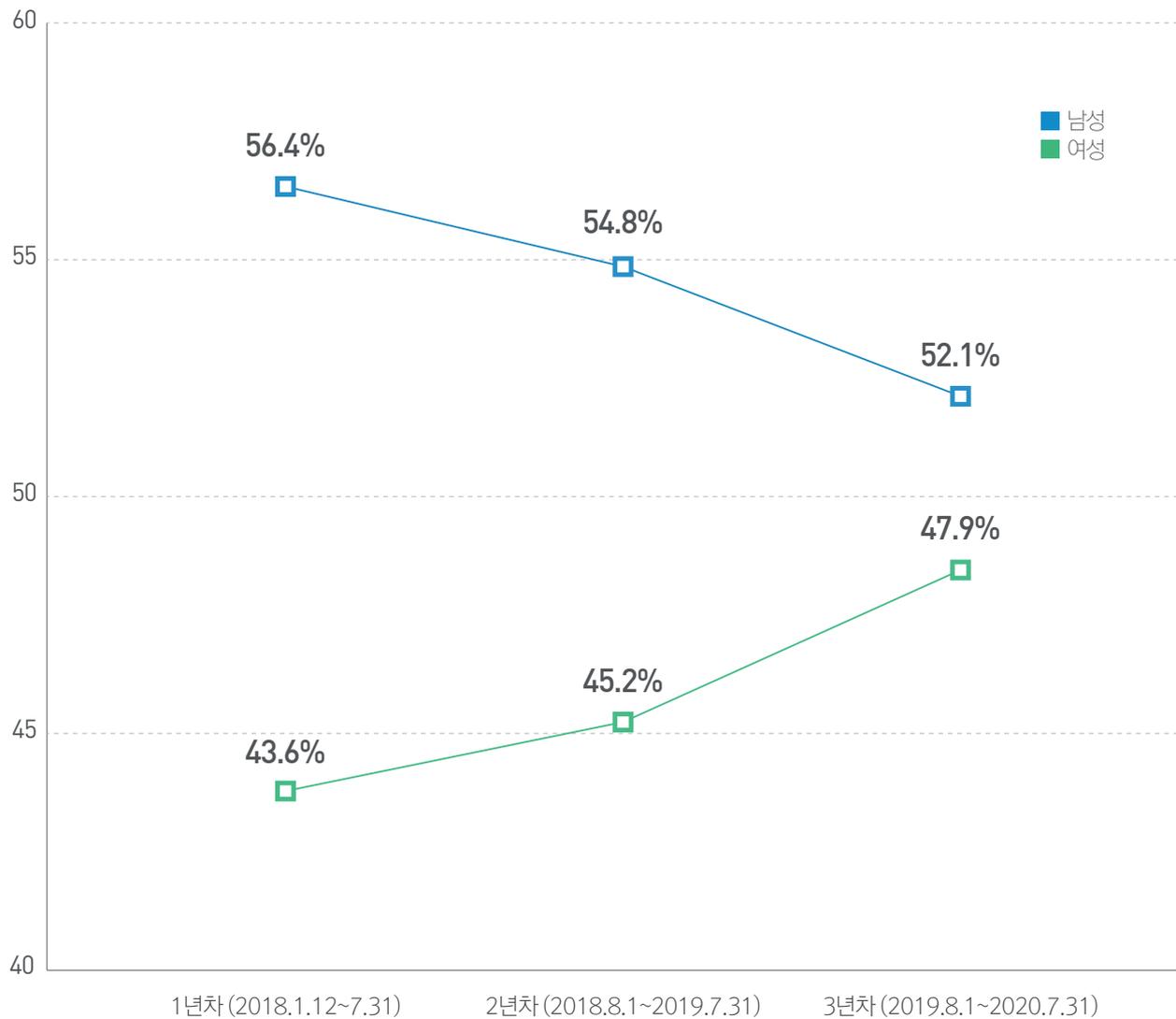
국민청원, 누가 하나요?

2018.1.12~2020.7.31. 기준

성별

국민청원 1년차에는 남성 방문자 수가 여성에 비해 12.8%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4.2%로 좁혀졌습니다.

연차별 방문자 성별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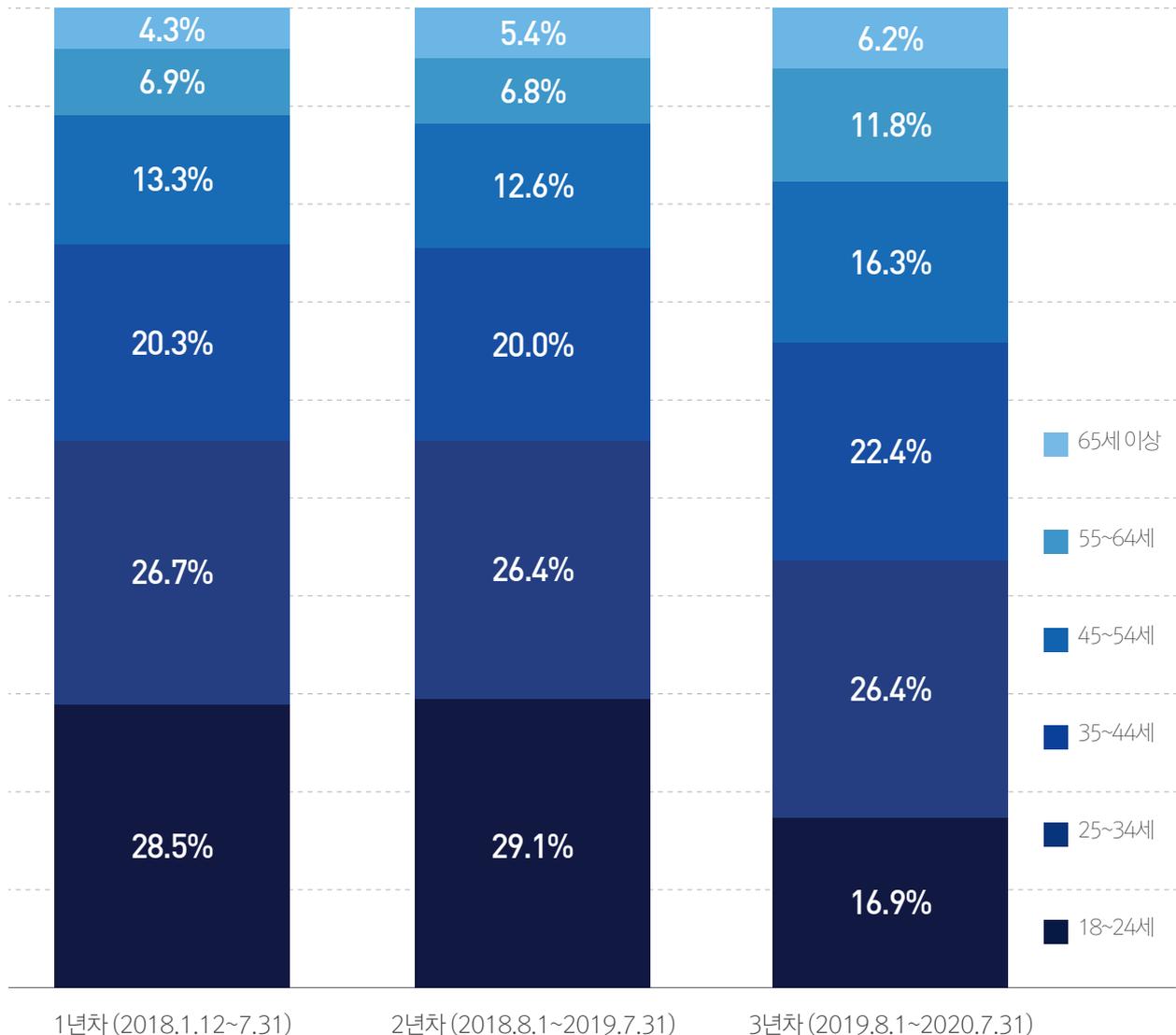
국민청원, 누가 하나요?

2018.1.12.~2020.7.31. 기준

연령별

국민청원 1년차에는 방문자의 절반 이상(55.2%)이 18세 이상 34세 이하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24.5%에 머물렀던 45세 이상 방문자 수가 현재는 34.3%까지 상승하는 등 연령별 참여가 다양해졌습니다.

연차별 방문자 연령별 비율 변화



기간별 국민청원 TOP 10



국민청원 1년차 (2017.8.19.~2018.7.31.)

순위	분야	청원명	동의수
1	외교/통일/국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714,875
2	미래	조두순 출소반대 (2017년 9월)	615,354
3	문화/예술/체육/언론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비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614,127
4	인권/성평등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2018년 5월)	419,006
5	육아/교육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018년 7월)	413,924
6	외교/통일/국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2018년 1월)	360,905
7	기타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 (2018년 6월)	354,935
8	기타	(한번씩만 봐주세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8년 5월)	334,173
9	정치개혁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2018년 3월)	304,320
10	외교/통일/국방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2018년 5월)	302,635

-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296,330/2017년 9월)
- 권역 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281,985/2017년 11월)
-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278,128/2018년 3월)

기간별 국민청원 TOP 10



국민청원 2년차 (2018.8.1.~2019.7.31.)

순위	분야	청원명	동의수
1	정치개혁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2019년 4월)	1,831,900
2	안전/환경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2018년 10월)	1,192,049
3	기타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2019년 3월)	738,566
4	인권/성평등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2018년 10월)	416,093
5	교통/건축/국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8년 10월)	406,655
6	인권/성평등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2018년 11월)	397,079
7	기타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2019년 3월)	386,506
8	안전/환경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2019년 4월)	380,769
9	인권/성평등	이수역 폭행사건 (2018년 11월)	365,418
10	문화/예술/체육/언론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364,920

-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337,964/2019년 4월)

-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281,764/2019년 4월)

- http 차단 정책에 반대의견 (269,180/2019년 2월)

기간별 국민청원 TOP 10



국민청원 3년차 (2019.8.1.~2020.7.31.)

순위	분야	청원명	동의수
1	안전/환경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2,715,626
2	안전/환경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2020년 3월)	2,026,252
3	기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2020년 2월)	1,504,597
4	정치개혁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2020년 2월)	1,469,023
5	인권/성평등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2020년 2월)	1,449,521
6	기타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2020년 4월)	1,007,040
7	보건복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2020년 1월)	761,833
8	정치개혁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2019년 8월)	757,730
9	안전/환경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 (2020년 7월)	735,972
10	안전/환경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2020년 3월)	650,579

-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439,648/2020년 3월)
-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430,032/2020년 5월)
-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15,691/2019년 11월)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그들의 신상을 알려주십시오



- ▶ **청원명**: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 ▶ **청원 게시일**: 2020년 3월 21일
- ▶ **동의수**: 2,715,626명
- ▶ **특징**: 국민청원 3년간 최고 동의수 기록, n번방 처벌 관련 유사 청원 5건 동의 수 합은 500만 명 이상
- ▶ **답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운영자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 ▶ **그 청원, 그 후**
 - 불법촬영물 범죄 처벌 상향,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경찰의 기소전 추정보전 제도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처벌법, 형법, 마약류 방지법 개정/2020년 4월)
 - n번방 등 피해자 특별지원단,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24시간 피해신고창구 운영 (2020년 4월~)
 -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2020년 4월 23일) 및 대책추진 점검
 - 법적용어 변경(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법정형 강화, 신고포상제 도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20년5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금지, 삭제 의무, 역외규정 도입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0년 5월)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심신 미약을 이유로...



- ▶ **청원명**: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 ▶ **청원 게시일**: 2018년 10월 17일
- ▶ **동의수**: 1,192,049명
- ▶ **특징**: 최초로 동의 수 100만명을 넘긴 청원

- ▶ **답변**: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 ▶ **그 청원, 그 후**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일명 ‘김성수법’ 통과 (형법 개정/2018년 12월)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꼭 국가직으로 전환을!



- ▶ **청원명**: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 ▶ **청원 게시일**: 2019년 4월 5일
- ▶ **동의수**: 380,769명
- ▶ **특징**: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 이후 사흘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 답변자로 소방청장과 현직 소방관이 출연해 소방관의 목소리를 전달
- ▶ **답변**: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습니다. 국가직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며,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그 청원, 그 후**
 -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5만2,516명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는 후 약 47년 만에 국가직 일원화
 - (효과)지역·관할 구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및 빠른 재난 대응 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산산이 조각난 스물 두살 친구의 꿈



- ▶ **청원명**: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청원 게시일**: 2018년 10월 2일
- ▶ **동의수**: 406,655명
- ▶ **특징**: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 피해자 친구들이 올린 국민청원. 5일 만에 20만 명 동의를 넘겼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원을 직접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
- ▶ **답변**: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 **그 청원, 그 후**
 - ‘윤창호법’ 입법 완료
 -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2019년 6월)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 ▶ **청원명**: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청원 게시일**: 2019년 11월 11일
- ▶ **동의수**: 415,691명
- ▶ **특징**: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 ▶ **답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그 청원, 그 후**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통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하는 ‘하준이법’ 통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19년 12월)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2020년 4월)
 -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교통법 개정안/2020년 4월)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신생아 두개골 손상사건



- ▶ **청원명**: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 ▶ **청원 게시일**: 2019년 10월 24일
- ▶ **동의수**: 215,186명
- ▶ **특징**: 청원에 등장한 가장 어린 피해자
이 외에도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고발 다수 게재
- ▶ **답변**: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 **그 청원, 그 후**
 - 보건의료인 등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 부과 및 과태료 기준 신설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실시 (2020년 2월, 2개소 적발 및 조치) 및 정례화 (연 1회)
 - 아동학대 예방 필수교육을 포함하는 의료진 보수교육 실시 (2020년 1월)
 - 의료기관 내 CCTV 설치·환자안전협의체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개선방안 논의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미세먼지의 위험



- ▶ **청원명**: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 ▶ **청원 게시일**: 2018년 3월 24일
- ▶ **동의수**: 278,128명
- ▶ **특징**: 환경 관련 20만 넘는 최초 국민청원

- ▶ **답변**: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자 - 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그 청원, 그 후**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2019년 4월)
 - 한중일 다자간 공조 강화 통한 국제 협력 방안 추진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소비자 알 권리 보장



- ▶ **청원명:**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 ▶ **청원 게시일:** 2018년 3월 12일
- ▶ **동의수:** 216,886명
- ▶ **특징:**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
- ▶ **답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 **그 청원, 그 후**
 - 민간주도 갈등 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구성·운영 (’18.12~’20.1, 총 11회)
 -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기존 협의회와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식약처 주도 실무협의회 운영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아이를 온전히 키울수 있도록



- ▶ **청원명**: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 ▶ **청원 게시일**: 2018년 2월 23일
- ▶ **동의수**: 217,054명
- ▶ **특징**: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

- ▶ **답변**: “우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14세까지였는데, 18세로 높입니다.
월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인데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 **그 청원, 그 후**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만14세 미만→18세 미만) 및 금액 인상 (월 13만원→20만원)
 -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신규 시행, 주거환경 개선
 - 청소년 한부모 위탁 교육기관 확대 등 자립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법 통과 (2020년 5월), 21대 국회에서 처벌 규정 신설 등 추가 개정안 다수 발의

국민과 함께 **그때 그 청원**

없는 주식을 배당해 판다고?



- ▶ **청원명**: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 **청원 게시일**: 2018년 4월 6일
- ▶ **동의수**: 242,286명
- ▶ **특징**: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난 사고로 증권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천주씩 배당한 사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을 줌
- ▶ **답변**: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 ▶ **그 청원, 그 후**
 -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조치 완료
 - 개인투자자 500명에게 4억 5천만원 보상 완료
 -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8년 5월)
 - :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 금감원·거래소 상시전담 조사 체계 구축

국민이 느끼는 국민청원

78% “국민청원 제도를 잘 알고 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 창구로써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자신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68%

70% “국민청원은 정부 - 국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

“국민청원 도입 후 정부 대응이 빨라졌다”

58%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2020년 5월 기준 전국 46만여 명)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1,200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83\%p$

조사방법: 웹조사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립가중)

응답(협조)율: 조사요청 9,354명, 조사참여 1,559명, 조사완료 1,200명 (요청대비 12.8%, 참여대비 77.0%)

조사일시: 2020년 6월 1일 ~ 6월 3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국민이 느끼는 국민청원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68% “국민청원은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정치참여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국민청원으로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70%

66% “국민청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나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

국민청원 3년, 국민과 함께 비워진 부분을 채워가겠습니다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 만족한다”

42%

69% “국민청원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

국민청원이 뿌린 씨앗

국민청원이 씨앗이 돼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입니다



법 제·개정

번호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 상향 등)
2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상 등 법정형 상향)
4	형법 개정 (심신미약자 감경규정 변경)
5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동물 이용 도박 광고 행위 동물학대 포함, 동물학대 처벌 상향)
6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
7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등)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 (안전우려 낮은 제품 인증 면제)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개정 (체육교습법 신설)
11	환자안전법 개정 (보건의료인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 부과 및 과태료 기준 신설)
12	교통안전법 개정 (어린이통학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
13	어린이 안전법 개정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 응급조치 의무화 등)
1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정형 강화 및 법적용어 변경 등)
15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삭제 의무 등)

국민청원이 뿌린 씨앗

국민청원에 모아주신 의견을 담아 다양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번호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1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2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및 금액 인상,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
3	전국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신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5	아동권리보장원 출범(기존 아동 관련 업무위탁 기관 통합)
6	버스·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적정 운임 보장, 과로·과적 방지 대책)
7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청소년부속합의서,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
8	e스포츠 공정위원회(임시) 발족, 표준계약서안 마련
9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실시 및 정례화
10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마련
1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 개정(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
12	K9 자주포 폭발사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
13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4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미세먼지 대책 마련)
15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 조사단' 발족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 2017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

국민청원,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